

“칼빈의 사회윤리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논평

이상원(총신대)

먼저 이번 제1회 베어드 강좌와 개혁신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계기로 에서 교수의 칼빈의 사회윤리에 관한 두 편의 귀중한 논문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편의 논문은 번역을 하고 또 다른 한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시간에는 논평자의 짧은 독일어 독해실력으로 논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에 에서 교수의 논문에 나타난 칼빈의 국가론과 카이퍼의 국가론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에서 교수의 논문의 목적은 이미 제목에 선명히 나타나 있다. “칼빈의 사회윤리의 현실성”- 이 제목에서 현실성이라는 단어는 오늘의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에서 교수는 노동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관 그리고 경제윤리관에 이르는 칼빈의 사회윤리사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이 사상들이 모두 20세기의 현실에도 적합성이 있음을 논증해내고 있다.

(1) 노동이란 세계의 일상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부에 대한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며,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로 이해된다. 칼빈의 노동관에 근거하여 노동을 생산 수단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노동관이 비판되고 노동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비판될 수 있다.

(2) 국가관. 국가는 가족 또는 머리-지체로 구성된 몸으로 비유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지배 관계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인격의 존재의 완성과 공동체의 과제의 수행을 돕는다. 유기체적 개념은 집단 이익이 침해하게 대립되고 있는 세속적 국가관의 영역에서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정부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선다(*der Mittelposition der Obrigkeit*). 여기서 정부는 이중적 의무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무로서 참된 종교를 보호하고 거짓된 종교를 제어하는 의무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을 향한 의무로서, 평화 유지, 형평을 이룬 권리의 유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 대한 보호, 고아원과 양로원의 설립, 폭력의 제어 등이다. 이때 이같은 임무들을 수행하는 방편은 법을 통한 권력의 행사(법치 국가 이념)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아직 법치 국가 이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통치자에게 법적인 시민의 보호를 요구한 칼빈의 요구는 당시의 지배적인 정체였던 군주정체를 극복하면서 점차로 민주주의정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법의 이데올로기적 남용과 독재권력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도 적용이 가능한 사상이다.

(3) 국가와 교회. 국가와 교회는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협동하여 일하는 관계로 파악된다. 세상 권력은 교회의 요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현존하는 교회 질서를 쓰러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는 가르침의 자유(복음 선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정부 당국은 서로를 경책함으로써 서로를 붙들어 주고 서로가 가진 관력으로써 서로를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정부는 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여기서 기독교론의 양성론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이같은 칼빈의 관점은 20세기에 교회와 국가간의 계약 관계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4) 저항권. 사적인 사람(Priatmann) 곧, 정치적 직무가 없는 시민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저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극적인 저항권이란 통치자의 영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떠나지 말고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 적극적 저항권이 인정된다.

(5) 경제윤리. 칼빈의 이자론은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깨뜨리면서) 오늘날의 남북/동서의 자본 협력과 관련해서도 적용성이 있으며, 모든 것의 균등화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여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의 역동적인 부의 전달이라는 개념이 그의 경제윤리의 핵심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가난으로부터의 혁명적인 해방도 부에 대한 남용적인 탐닉도 모두 배제되면서 중간길을 걷고자 하는 칼빈의 노력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에서 교수의 논문 가운데 논평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문제는 칼빈의 국가론이다. 특히 칼빈의 국가론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안에 있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사회사상가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론과 좋은 대조가 된다. 어떤 점에서 두 개혁사상가의 국가론이 대조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칼빈의 공헌과 한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칼빈의 국가론은 두 가지 점에서 카이퍼의 국가론과 대조된다.

(1) 칼빈은 국가를 가족과 같은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같은 유기적 국가관이 집단이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속적 국가론을 교정하는 규범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말한다. 반면에 카이퍼는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면서 사회는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성격을 갖지만, 국가는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먼저 형성되고 그 후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악을 제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치 방법이 바로 법을 통하여 행사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국가는 다분히 기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국가관 가운데 과연 어떤 국가관이 보다 오늘날의 현실에 더 적합성이 있는 기독교적 국가관이 될 수 있는가?

(2) 칼빈은 국가의 위치를 하나님과 시민 사이의 중간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국가→시민”이라는 계층구조적인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카이퍼는 국가의 위치를 하나님과 시민 사이에 두지 않는다. 카이퍼는 하나님과 시민 사이에 계층구조적으로 어떤 인간이나 제도도 매개자로 개입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과 시민과의 사이는 오직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뿐이다. 국가는 시민들 그리고 많은 작은 연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와 나란히, 그리고 그 옆에 정위된다(nevenschikking). 물론 칼빈의 경우에 있어서나 카이퍼의 경우에 있어서나 국가가 법적 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통치자는 섬기는 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국가를 칼빈과 같이 계층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에 더 적합한가, 아니면 카이퍼와 같이 수평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교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개혁신학 사상의 국가론을 보다 풍성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